

# 육아정책 소식

##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공 보호체계 본격 실행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9월 29일(화)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5월에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제시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담당 인력의 부족과 민간기관 중심 체계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편한 아동보호체계의 주요 내용은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지자체가 지역 아동보호의 컨트롤 타워로서, 보호 아동의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 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보호 종결 심의 결정을 통해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고, 시군구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요원 인력을 배치하여 상담과 검사,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및 지원,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에게 행정조사로써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에 집중하여 상담, 심리치료, 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사례별 필요 자원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코로나19 시대, 2016년생 우리아이들을 살펴보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와 경찰청(김창룡 청장)은 10월 5일(월) 만3세 아동(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3세 아동(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만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하여,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처는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만3세 아동 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제외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여성가족부, 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돌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이정옥 장관)는 9월 15일(화) 코로나19 위기와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과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시설 위주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며, ‘공동육아나눔터’를 268개소에서 내년에는 332개소로 확대한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감염병 확산 등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가족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가족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지역 내 ‘가족센터’를 26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족에게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을 88개소로 확대한다. 이정옥 장관은 “지역과 이웃이 함께하는 상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을 위한 지원과 비대면 가족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시간) 정부 지원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원격수업 등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추가지원 (이용요금 지원비율) 0~85%→40~90%(9.2.~12.31.)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1년 이내 → 3년 이내), 인·적성 검사 실시, 이용자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실시('20.11.20. 시행)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대에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1월 27일(금)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번 대책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여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돌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 〉

코로나19 시대 돌봄 체계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대응</li> <li>•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가족 확진, 자가격리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li> <li>•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li> </ul>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 확대,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li> <li>•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 해소 위해 원격학습 지원 및 가정 내 온라인수업 지원</li> </ul>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 육아휴직 분할사용 등 가족 돌봄 지원 확대</li> <li>•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 원격수업 대상 학생과 주기적인 소통과 상담</li> <li>• 부모교육, 심리상담 등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 강화</li> </ul>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이정옥 장관)는 9월 24일(목) 한부모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는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

부모의 생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이 지원 대상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생계와 가사, 양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11월 16일(월) 관계부처(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하여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한부모 가족지원 대책 주요 내용 〉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출산 갈등상담, 청소년 상담전화 등 정보제공 확대</li> <li>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9세 이하로 확대,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li> <li>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 강화</li> </ul>
차별적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li> <li>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 대상 가족다양성 이해교육 추진</li> <li>민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 추진</li> </ul>
자녀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급여 외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li> <li>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li> <li>일과 양육 병행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li> <li>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소득기준과 입소기간 확대</li> </ul>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 안내,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li> <li>임신·출산으로 유예 및 휴학 허용</li> <li>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 추진</li> </ul>

##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부담 덜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이정옥 장관)는 9월 22일(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 1차 추경 시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약 670만 명) 확대(만 7세 미만 아동(1차추경): 약 263만 명) 되었다. 또한, 신속·정확한 지급과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형태는 현금으로 변경하였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별도 신청 없이 9월내로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교육 지원청에 방문하여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 교육부,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10월 30일 개통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0월 30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0학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현재는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모집 추첨방식을 희망순(중복선발)에서 희망순(중복선발제한)으로 개선하여 3회망 모두 탈락될 확률을 최소화하였다. 희망순에 따라 1회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개선된 중복선발제한 원칙에 따라 2, 3회망 추첨에서 제외함으로써, 2020학년도 추첨방식보다 1회망 유치원 선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우선모집 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자격 검증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일반모집 사전접수 제도도 신설되어, 본 접수 전 2일간을 시와 도별로 각각 하루씩 제공하여 교육청 관내 소속 유치원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접수결과 및 선발결과는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해져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